



“맑고 청렴한 NIPA! 밝고 투명한 IT Korea!”

2011년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계획(안)

2011. 3.

목 차

I . 2010년도 추진성과	3
II . 2011년도 환경분석	5
1. 대내 · 외 환경	5
2. 업무특성	6
III . 2011년도 추진목표 및 전략	7
IV . 2011년도 세부추진계획	8
1. 반부패 인프라 구축 · 운영	8
2. 기관장 노력도	11
3. 제도개선 종합대책	14
4. 부패영향평가 운영	15
5.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	17
6. 반부패 교육 및 홍보	18
V . 추진일정	21

I. 2010년도 추진성과

주요 성과

부패 사고 발생 제로 ‘0’, 행동강령 위반자 제로 ‘0’

- ◆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2년 연속 ‘우수기관’ 선정
- ◆ 지식경제부 공직기강 점검 ‘우수기관’ 선정

□ “청렴문화 내재화 및 Clean NIPA 구현”을 위해 반부패 인프라 구축, 기관장 솔선수범, 제도개선, 행동강령 이행, 청렴교육 등 부패방지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

○ (인프라 구축) 청렴정책 의사결정 등을 위한 반부패 전담조직 구축 운영* 및 반부패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·운영**

* 윤리경영 추진/실무위원회 구축·운영(8회), 청렴옴부즈만 운영기준 제정(‘10.4.9)·운영(3회), 기업호민관제도 도입(‘10.10.26)

** 기술료 전문위원회(2회), 자산운용위원회(2회), 리스크관리위원회(3회), 고객모니터링단(1회) 운영

○ (기관장 솔선수범) 부패척결에 대한 기관장의 강력한 실천의지 대·내외 전파* 및 청렴활동 성과에 대한 포상제도 운영**

* CEO청렴메시지(2회), 동영상 강의(2회), 사회공헌활동(9회) 등

** 청렴마일리지 제도마련(‘10.4.9) 및 우수부서와 우수직원 포상(4명)

○ (제도개선) 불합리한 관행이나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권고과제*(8건) 추진 및 자율적 제도개선과제**(4건) 발굴·개선

* 공공기관감독 업무의 투명성 실효성 제고 방안, 공무원 회의 참석 수당 관련 투명성 제고

** 자금운영·고가장비 구입 적정성 심의기능 강화, 수행기관의 고가장비 구입 적정성 심의기능 강화, 예산 집행기준 강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, 센터 장비 구축사업의 검수위원회 운영기준 강화

○ (부패영향평가) 원규 제·개정시 발생될 수 있는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제도마련* 및 전담부서(직원)를 지정·운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** 이행

* 부패영향평가지침 제정('10.5.27) 및 부패영향평가 실시(7회)

** 수의계약 및 1인 견적입찰 금액기준 강화 등 권고과제 22건 완료

○ (행동강령 이행) 위반행위 신고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* 및 공직윤리 정착에 필요한 수범제도** 운영,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(5회)

* 공금횡령 범죄고발 기준 및 내부 공익신고처리 기준 마련('10.4.9)

** 임원 직무청렴계약제, 청렴서약제, 청렴마일리지 제도, 청렴도 자가진단

○ (청렴교육·홍보) 반부패·청렴의식 내재화를 위해 외부전문가 및 온라인 동영상 교육* 등을 추진하고 민관협력 우수사례 홍보**

* 전직원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(2회), 동영상 교육(2회) 실시

** 민관협의체 구성 및 활동내역(청렴옴부즈만, 기업호민관제도) 보도

□ 다만,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는 '보통' 등급을 받아 세부과제별 결과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강구

○ 청렴활동의 성과평가 연계와 청렴의지 전파 등을 '11년 반부패 청렴시책에 반영하여 중점적으로 추진

II. 2011년도 환경분석

1 대내 · 외 환경

가. 외부환경

- (국가정책)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“공정사회 실현”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
 - ※ ‘공정사회는 우리사회를 선진일류국가로 만드는 필수적인 일’(제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 시 대통령 말씀, ’11. 2. 17)
 - ※ UN반부패 협약, OECD 뇌물방지협약 등 반부패 국제규범 이행 강화, ‘10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(CPI) 178개 중 39위(국제투명성 기구)
- (국민의식) 관행적 부조리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고조됨에 따른 공직자에 대한 높은 청렴성 요구
 - ※ 최근 고위공직자의 알선·청탁 등 도덕적 해이와 카지노 상습도박사례 발생 등
- (IT산업) 국가경제 활성화에 핵심동력으로 정부의 동반성장 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신산업 창출 등 IT산업의 중요성 부각
 - ※ 불공정제도 개선 및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 개선 등
- (사회적 책임) 국민과 고객(IT기업)에게 신뢰를 받기 위한 청렴 경영, 사회공헌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 증대
 - ※ 투명경영 및 효율화, 취약계층지원 및 정보격차해소 등 나눔·봉사문화 확산
- (감독·평가) 기관평가, 부패방지, 내부통제분야 등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및 성과평가체계 강화
 - ※ ‘10년부터 부패방지 시책 및 종합 청렴도 평가대상기관 확대(권익위), ‘11년 경영실적 평가기준 신설(기재부, ‘윤리경영 및 내부건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), ‘10년 자체감사기구의 운영실태 심사(감사원, 공감법 제39조)

나. 내부환경

- ☐ (기관장 의지) 기관장의 강력한 반부패·청렴시책 추진 의지
※ '10년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에 대한 구성원 인식수준(국민권익위)은 9.33점(공직유관단체 평균 8.80점)
- ☐ (청렴문화) 정부의 부패방지시책 및 청렴도 향상 등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청렴문화 미성숙
- ☐ (반부패 의식) 반부패 추진체계 운영 및 지속적인 청렴활동 수행을 통해 우리원 직원의 윤리의식 제고
※ '10년 내부청렴도(국민권익위) 8.89점(공직유관단체 평균 8.13점)
- ☐ (추진체계 및 제도) 반부패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행동기준 및 처벌기준을 시행하고 있으며, 부패근절을 위해 정부권고안에 따른 관련규정 보완 필요
- ☐ (청렴보상체계) 청렴마일리지 운영을 통해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성과체계와 연계하는 청렴활동 제고 노력 필요

2 업무 특성

- ☐ (기관성격) 정보통신산업의 정책기획, 기반조성 및 산업진흥 지원을 위한 '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'으로 전담기관(사업의 관리·감독) 및 주관기관(직접 사업수행)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형 기관임
※ (설립근거)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6조, (정원) 263명, (예산) 4,063억원
- ☐ (업무특성) 국민·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인·허가 업무는 없어 부패발생 개연성은 낮은 편이며, 주관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의 관리·감독과 직접 수행사업의 용역계약업무 등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 요구
- ☐ (고객특성)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및 촉진을 위한 사업 수행은 주로 우리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, 학교, 협회·단체 등이 주관하며, 일부 IT기업이 참여하는 형태로 일반 국민은 대상이 아님

Ⅲ. 2011년도 추진목표 및 전략

미션

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준법경영과 내재적 윤리경영을 실현하여
정보통신산업 고도화와 미래신산업 창출

비전

청렴문화 내재화, Clean NIPA 구현

목표

청렴도지수 9.0이상, 부패 사고 발생 '0' 달성

추진전략

반부패 인프라
구축·운영



0 반부패 규범의 제도화 및 지속적 개선
0 지속적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(T/F) 운영

청렴 마인드
공유·확산



0 CEO의 솔선수범과 전달체계 구축
0 대·내외 홍보활동 강화

반부패
실천체계 구축



0 자율적 제도개선 시스템 운영
0 청렴 우수부서·직원의 보상체계 운영

이행사항
점검체계 확립



0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이행사항 점검
0 실효성 있는 자체감사 시행

IV. 2011년도 세부추진계획

1 반부패 인프라 구축·운영

가. 추진방향

- 반부패 추진체계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알선·청탁 및 관행적 부조리 근절을 위한 청렴 활동 강화
- 부패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자율적인 통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협력 활성화

나. 추진내용

□ 반부패·청렴시책 전담 조직 및 추진체계 운영(계속)

- 최고 의결 기구인 “윤리경영추진위원회” 운영(연4회 이상)
 - (구성) 원장, 주요 부서장*, 직원대표(3) 등 10명 내외(별첨 참조)
 - * 본부장(2), 정책기획단장, 경영지원단장, 부설기관장
 - (운영) 분기별 1회 개최(사안발생시 수시)
 - (기능) 반부패 청렴대책의 주요사항 심의 및 의결 등
 - 실무 의견수렴을 위한 “윤리경영실무위원회” 운영(연4회 이상)
 - (구성) 감사실장과 부서별 선임팀장 10명 내외
 - (운영) 분기별 1회 개최(사안발생시 수시)
 - (기능) 반부패 추진과제 검토 및 이행사항 점검 등
- ※ 안건에 대한 회의결과는 ‘윤리경영 게시판’에 게시·공유

□ 알선·청탁 및 관행적 부조리 근절을 위한 노력 강화(신규)

- 직위를 이용한 알선·청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취약 업무별로 구체적인 행위기준 마련*(9월)

* 국민권익위원회의 관련지침('11년 상반기 시달 예정)을 준용하여 추진

- 부패행위 미신고자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(5월)하고 부패 행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엄격히 적용(발생시)
 - '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'에 대한 징계처분 강화기준 마련
 - 공금횡령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, '공금횡령 고발 기준'에 의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부조리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벌

※ 공금횡령 고발기준 제정('10.4.9)

□ 시민 감시관인 “청렴 옴부즈만” 제도 운영(개선)

- 감사업무의 제한적 운영에서 지원·사업업무 중심으로 확대 하여 자율적 반부패·청렴활동 유도(연중)

- 경영지원 및 사업추진 업무에 대한 모니터링, 제도개선 사항 발굴, 자체 청렴교육, 자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활용

※ 예산집행의 투명성, 원규 제·개정시 부패유발성 여부, 업무프로세스 적정성, 평가회의 공정성 확보 여부 등을 중점 점검

□ 민관협력 체계 운영(계속)

- 사업추진 및 기관경영의 청렴성 향상을 위해 민간협의체 운영(연중)

구분	구성내역	회의개최	운영부서
자산운영위원회	- 서울시립대학교 박종원교수 등 외부전문가 5명	4회	기금운용팀
리스크관리위원회	- 충남대학교 윤평식 교수 등 외부전문가 4명	4회	“
고객모니터링단	- 쿼터뷰 오현식대표 등 주요사업 고객 30명	2회	창의경영팀

- 청렴성 제고를 위해 민간부문과의 공동협력 사업 발굴·추진(연중)
 - 부패방지를 위한 간담회 및 토론회, 청렴캠페인 등을 시민 단체*와 공동으로 추진하여 제시된 의견을 우리원 정책에 적극 반영
- * IT기업 및 협회, 아름다운가게, 녹색소비자연대 등

□ 반부패 수범사례 전파 및 윤리경영 프로그램 개발(계속)

- 공직유관단체 등 타기관에 전파 가치가 높은 모범사례나 창의과제를 발굴하여 대외 홍보*를 통해 기관 이미지 제고(연중)
 - * 중앙·지방일간지, 인터넷매체, 권익위 자료 수록, 타기관 벤치마킹 등
- "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*", "청렴 동아리**" 등 윤리경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외부전문가 등을 통해 윤리경영교육 및 간담회 실시
 - * 명절(설, 추석)기간동안 선물 주고 받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캠페인을 실시하여 "공정하고 따뜻한 사회 정착"을 위한 공감대 확산
 - ** 직원의 청렴의식 내재화 및 침렴 문화 확산을 위한 자율 학습모임 구성

□ 부패방지 시책추진(국민권익위원회)협조사항 적극 참여(계속)

-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회의·공청회·심포지엄·청렴교육 전문가과정 등 반부패 청렴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
- 부패방지 시책평가 관련 제출 의무사항 준수
 -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계획 제출 : 3월 30일
 - 부패방지 시책평가 상/하반기 실적보고서 제출 : 6월 30일/11월 4일
 - 기타 시책평가 관련 요구자료 기한내 제출

가. 추진방향

- 조직 구성원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진(기관장, 본부장)의 강력한 청렴실천 의지표명 및 솔선수범 등 청렴리더십 확립
 - ※ '11년부터 경영진에 부기관장을 포함하고, 부기관장이 없는 기관은 직하위자의 청렴활동 평가
- 신상필벌의 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활동 우수직원에 대한 보상체계 및 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

나. 추진내용

□ 경영진(기관장, 본부장)의 청렴의지 전파 및 공유(개선)

- 직원간담회, 보직자 리더십 교육, 워크숍 등을 통해 반부패 · 청렴 및 윤리경영 실천의지 표명(연중)
 - 청렴 및 윤리경영 실천의지 표명(연중)
- 직원들의 반부패 · 청렴 등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기관장(원장)이 정부의 청렴정책 등을 강의하는 “청렴 동영상” 교육 실시(2회)
 - ※ 청렴 동영상 교육자료는 ‘윤리경영 게시판’에 게시
- 외부기관에서 주관하는 반부패 · 청렴 관련 캠페인 · 토론회 참석, 언론매체 기고 등 대외활동 강화(연중)

□ 경영진(기관장, 본부장)의 솔선수범(개선)

-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(매월)
 -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을 당초 원장에서 본부장까지 확대하고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홈페이지 공개

- 'e-감사시스템' 구축(분석·설계)을 통한 내부통제체계 강화(12월)
 - 감사계획 수립, 감사준비, 감사실시·보고 등 일련의 처리과정을 자동화하고 내부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리스크관리 등 사전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상시모니터링 체계로 구성
 - ※ 일상감사 및 법인카드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('09.8.)중이며, e-감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EA기반의 정보화전략계획(ISP) 수립('10.6.)
-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금조성과 취약계층 및 자매결연단체에 다양한 봉사활동 전개(연중)
 - ※ NIPA 나누미 기금, 저소득층 연탄 기부, 충북진천 장애인·독거노인 목욕봉사 등

□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실시(신규)

- 고위공직자의 청렴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·관리(7월)
 - (평가분야) 직무청렴성, 사회수범성, 준법성 등을 측정
 - ※ '직무청렴성' 및 '사회수범성'과 관련된 총 19개 항목으로 구성, 준법성은 감점 항목
 - (평가방법) 내부(상위·동료·하위) 및 외부(용역과제 수행업체 등 이해관계자)평가단을 구성하여 온라인 설문방식으로 추진
 - (점수산정) 청렴도 = 내부평가(75%) + 외부평가(25%) - 계량지표 감점
 - (평가결과) 피평가자 본인에게 통보하여 자기관리 유도
 - ※ 별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예정

□ 청렴성과체계 확립을 통한 반부패 인센티브 시스템 정착(개선)

- 청렴활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청렴성과 인센티브시스템 보완
 - 청렴활동을 성과평가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(3월)하여 우수 직원에게는 인사상(금전적) 우대('12년 연봉에 반영)
 - 청렴마일리지 감점제 도입 등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우수부서 및 개인을 대상으로 포상(상장 및 부상) 및 인사상(가점부여) 우대

- 부패 공직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강화(6월)
 -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기준*을 검토하여 기관특성에 맞게 추진
- * 직무와 관련된 10만원 이하 금품수수시 감봉 또는 정직 처분

□ '나의 청렴도 자가진단의 날' 시행(계속)

- (대상) 전 직원
- (주기) 분기별(4회)
- (내용) 국민권익위원회 진단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각종 부패 유발상황 특성을 분석·정리한 항목에 대해 개개인이 청렴도를 자율적으로 진단*
 - * '청렴도 테스트' 화면의 시작버튼을 클릭하여 총10개 문항에 대해 “예” 또는 “아니오” 선택하고 진단결과 확인

□ 공정·투명한 직무수행 등을 위한 청렴서약 제도 운영(계속)

- (대상) 전 직원
- (주기) 연단위('11.8.24~'12.8.23)
- (내용) 윤리규범* 실천을 다짐하는 청렴서약 실시
 - * 윤리헌장, 윤리강령, 임직원 행동강령의 주요 준수사항 내용 포함

□ 부패공직자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(계속)

- 부패공직자 정보(D/B) 입력(발생시)
 - 자료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부패공직자 현황을 철저히 관리
- 공직자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준수(발생시)
 - 비위면직자 발생시 현황 보고 철저
 - 비위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안내

가. 추진방향

- 제도개선 권고과제(국민권익위원회)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 및 청렴 옴부즈만, 자체감사 등을 통해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·개선

나. 추진내용

□ 자율적 제도개선 시스템 구축·운영(계속)

- 부패유발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·개선하기 위해 부서별 제도개선 추진체계 마련
 - 부서(단)별 1개 과제 이상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, 그 현황을 정기 점검하여 조기 완료 유도
 - ※ 부패현상 발생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절차, 인적·조직적 측면 등 종합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조치실적을 관리
- 자체감사 활동을 통해 불합리하거나 비능률적인 사항 및 부패유발요인 등을 업무별 지도·점검 등을 통해 발굴 및 개선(연중)
 - 대상업무의 합법성(관련규정), 공정성(추진절차), 경제성(예산 낭비요인), 합리성 등을 검토·점검

□ 제도개선 권고과제 적극 이행(발생시)

- 제도개선 권고과제 시달(국민권익위원회)시 지침의 취지와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
 - ※ 공직유관단체 제도개선 권고과제('07년 4개, '09년 4개) 이행 완료('10.10.)

가. 추진방향

- 사규 제도개선 권고과제(국민권익위원회)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 및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자율적인 부패영향평가 실시

※ 부패영향평가지침 제정('10.5.27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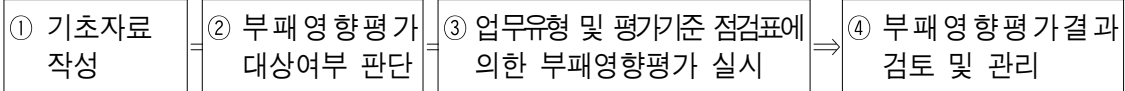
나. 추진내용

□ 원규의 부패요인을 분석·평가하기 위한 부패영향평가 실시(계속)

- 원규 제·개정 사항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
 - (대상) 인사·회계·계약 등 기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부패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업무 등
 - ※ 조직운영, 업무분장, 문서관리 등 부패 유발가능성이 없는 원규는 제외
 - (절차) 원규소관부서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, 부패영향평가총괄부서(감사실)는 부패영향평가결과를 검토 및 관리

원규소관부서(예산팀, 총무팀, 회계팀 등)

부패영향평가 전담
부서(감사실)



- (범위) 원규 제정안은 전문, 개정안은 해당 조문
- (처리) 부패영향평가총괄부서는 부패영향평가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 의견을 통보하거나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개선·조치

- 이해관계자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규 공개범위 확대(5월)
 - 홈페이지에 원규 전체 공개(6개 규정, 9% → 44개 규정, 100%)

< 원규 현황 >

계	정관	규정	요령·지침
44	1	9	34

□ 정부의 사규 개선 권고과제 적극이행(계속)

-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심의·의결위원회 규정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(6월)
 - 자산운영위원회 및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규정을 「심의·의결위원회 표준 규정(안)」을 적용하여 개선

□ 부패영향평가 교육 및 업무협약 추진(연중)

- 부패영향평가 교육 실시
 - (대상) 예산·회계·계약·인사 실무자
 - (주기) 연 2회
 - (내용) 공직유관단체 사규 부패영향 평가매뉴얼 및 사례집(국민권익위, '10. 5)을 중심으로 부패영향평가 방법 및 사례 중심의 노하우 전달
- 부패영향평가 관리부서(감사실) 및 원규소관부서 업무협약
 - (대상) 원규소관부서 담당자
 - (주기) 원규 제·개정시
 - (내용) 해당 원규의 준수의 용이성, 행정처리의 투명성, 재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등을 논의

가. 추진방향

- 공정한 직무수행 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동강령 이행환경 확보 및 제도운영, 행동강령이행실태 점검 등 추진

나. 추진내용

☐ 행동강령 이행환경 확보를 위한 신고창구 운영 및 제도시행(계속)

- 온·오프라인에 행동강령 신고창구 운영(연중)
 - 국민권익위원회의 사이버 신고센터(행동강령 신고상담 사이트) 연계
 - ※ 접근 용이성 확보를 위해 NIPA 홈페이지에서 원클릭으로 접속 가능
 - 홈페이지 내 「부조리(행동강령 신고) 및 예산낭비 신고」 운용
 - 본원 및 부설기관 내 클린신고 함 설치·운영

-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운영(연중)
 -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·보상 지침을 마련*·운영중이며, 내부직원의 신고의식 고취를 위해 교육 실시

* 내부 공익신고 처리기준 제정·시행('10. 4. 9)

☐ 행동강령 운영 수범사례 적극 도입 및 행동강령 개정 추진(필요시)

-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파 예정인 「행동강령 운영 우수사례집」 활용하여 기관 특성에 맞는 행동강령 우수 제도 도입
- 윤리경영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행동강령의 개정여부 검토

□ 행동강령 상담체계 운영 및 이행실태 점검(계속)

- 상담방식 다양화를 추진하고 찾아가는 행동강령 교육 실시
 - 대면 중심의 상담에서 유선, 이메일 등으로 확대
 - 청렴교육 전문가 및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 교육자료 등을 활용한 부서별 교육 추진(5회)
- 자체 점검반 구성 등을 통해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
 - (대상) 전직원
 - (시기) 취약시기(명절 및 연말연시 등 4회 이상)
 - (점검사항) 금품·향응수수 등 행동강령 이행실태
 - (조치기준) 위반자는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엄중처벌

6 반부패 교육 및 홍보

가. 추진방향

- 윤리의식 내재화 및 반부패·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교육(보직자)을 의무화하고 청렴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촉진

나. 추진내용

□ 반부패·청렴교육 강화(개선)

- 보직자 청렴교육 의무화 추진
 - (대상) 팀장, 단장, 본부장
 - (교육시간) 1인당 연간 5시간 이상 교육이수
 - (교육분야) 청렴, 윤리, 공직자 행동강령 등 공직자의 자세(6대 덕목 : 공정, 책임, 절제, 약속, 정직, 배려) 등
 - (교육방법) 우리원 E-HRD 시스템의 '윤리의식 수준별 교육', 국민권익위원회의 '청렴교육 사이버과정' 등 활용

- 상·하반기 반부패·청렴 집합교육 실시
 - (대상) 전직원
 - (교육시간) 연간 2시간 이상
 - (교육분야) 청렴, 윤리, 공직자 행동강령 등 공직자의 자세 (6대 덕목 : 공정, 책임, 절제, 약속, 정직, 배려) 등
 - (교육방법) 청렴교육 전문가 활용
-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담당 실무자 및 관리자 전문역량 강화(연중)
 -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가과정 참석
 - 감사교육원 감사 및 회계 전문가과정 참석

□ 청렴교육·홍보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기관 벤치마킹 시행(계속)

- 청렴교육·홍보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전파(8월)하고 경진 대회(국민권익위원회) 참여
- 유관기관 청렴교육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시행(연중)

□ 청렴교육·홍보 콘텐츠 개발 및 활용(계속)

-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·청렴정책 추진지침 및 청렴관련 교육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·활용
-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요청한 "청렴로고송", "청렴이미지 마크"를 적용하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("위원회 자료실")의 청렴자료를 "찾아가는 행동강령 교육" 등에 활용

V. 주요 추진일정

구분	주요 실천계획	일정	비고
반부패 인프라구축	반부패 전담조직 운영	1월~12월	감사실
	취약업무별 구체적인 행위기준 마련	9월	감사실
	부패행위 미신고자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	5월	감사실
	청렴 옴부즈만 확대 운영	3월~12월	전부서
기관장 노력도	업무추진비 공개 대상 확대	4월	산업진흥본부 /기반조성본부
	e-감사시스템 구축(분석·설계)	12월	감사실 (정보서비스팀)
	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	7월	감사실
	징계양정기준 강화	6월	감사실
	성과평가 연계방안 마련	3월	감사실
	청렴서약 실시	8월	감사실
제도개선 종합대책	자율적 제도개선과제 발굴·추진	3월~10월	전부서
	자체감사 및 제도개선과제 모니터링	1월~12월	감사실
	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추진	수시	감사실
부패영향평가 운영	부패영향평가 실시	1월~12월	감사실
	원규 공개범위 확대	5월	예산팀
	심의·의결위원회 규정 개선	6월	예산팀 (감사실)
	원규소관부서 실무담당자 교육	8월	감사실
행동강령이행 및 신고활성화	행동강령 신고창구 운영	1월~12월	감사실
	행동강령 수범사례 도입	수시	감사실
	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	1월~12월	감사실
반부패 교육 및 홍보	보직자 청렴교육 의무화 추진	3월~10월	감사실
	청렴교육·홍보 수범사례 발굴·전파	8월	감사실
	반부패·청렴 집합 교육	5월, 9월	감사실
	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콘텐츠 활용	수시	감사실

※ 추진일정 등은 상황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 될 수 있음